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21. 02.

주최 : 강득구 의원

차 례

1 **개회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3

2 **주제발표**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 5

3 **사례발표** (하태화, 광명시 평생학습원장) ····· 12

4 **종합토론①** (현영섭, 경북대학교 교수) ····· 16

5 **종합토론②** (최하영,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 19

6 **종합토론③** (조이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회장) ·· 20

7 **종합토론④** (심한식, 국평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장) ·· 22

개요

○ **(목적)** 국민 접근성 높은 평생학습체제의 전제로서 지역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현장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거버넌스 정비 및 관련 사업 설계 방향 논의

○ **(일시/방식)** ´21.2.3(수) 14:00 / 온라인 비대면(ZOOM 활용 생중계)

○ **(주관)** 강득구 의원

세부 내용

○ **(주제)**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 방향

○ **(토론자)** 정부, 학계, 지자체, 유관기관 소속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성 명	소 속	비 고
김현수	순천향대 평생교육과 교수	발제 및 사회
하태화	광명시 평생학습원장	사례발표
현영섭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토론
최하영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토론
조이현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회장	토론
심한식	국평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장	토론

○ **(세부 일정)** 발제, 지자체 사례 발표 및 상호 토론 등 실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10)	인사 및 개회	
14:10～14:25(´15)	발제	발제자
14:25～14:40(´15)	지자체 사례 발표	
14:40～15:10(´30)	주제 발표	토론자
15:10～15:25(´15)	상호 토론	발제자, 토론자
15:25～15:30(´05)	마무리 및 폐회	

개회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요한 의정활동의 목표 중 하나로 삼은 '보편적 평생학습사회' 실현의 출발점으로서 평생교육 체계는 매우 중요한 논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0년 국가평생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니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았고, 취약계층의 참여율은 27.4%로 전체 참여율인 40%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할 평생학습에서조차 연령별, 소득별 격차가 발생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그리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생애주기의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의 역할은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삶-일-배움이 선순환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편적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밀착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교육 체계 또한 지역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로 이어지는 현재의 평생교육 전달체계 하에서 지역 주도의 평생교육 추진은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사회, 그리고 평생학습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평생학습 정책은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풀뿌리 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평생교육 추진체계 또한 이를 토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지역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사회를 위한 적합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토대로 지역의 평생학습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주도의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자체 중심의 평생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발제를 준비해주시고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신 김현수 교수님, 전국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서 지자체 중심의 우수한 평생학습 사례를 발표해주신 하태화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으로 함께해주신 현영섭 교수님, 최하영 과장님, 조이현 회장님, 심한식 본부장님을 비롯해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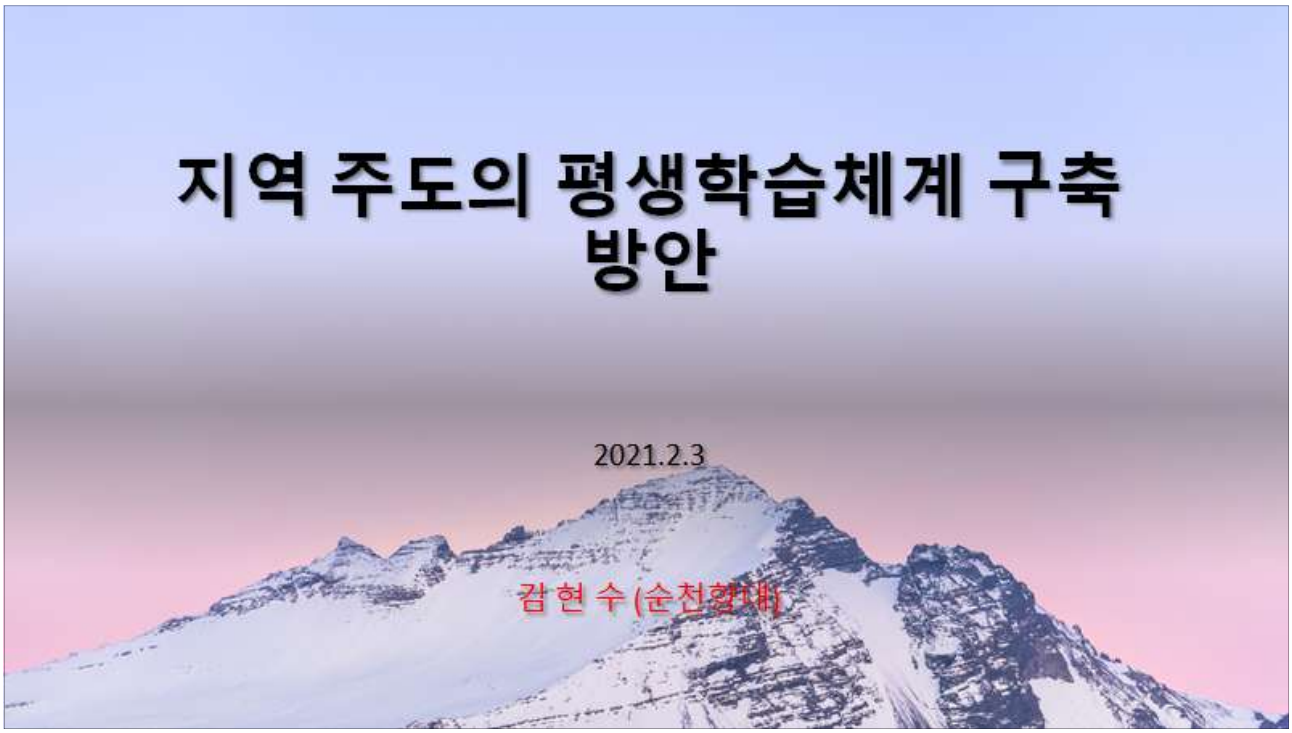
오늘 토론회가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는 실효성 있고 의미 있는 평생교육 체계 마련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3일

국회의원 강득구

주제 발표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과 교수)



1. 필요성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평생교육 법령 및 정책 마련, 지원 제도 운영 등 top-down 방식의 평생교육 활성화가 어느 정도 평생교육의 저변 확대와 인식 확대를 거두는 성과도 달성함.

- 평생학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 증가

❑그러나 평생교육은 지역 차원의 다양한 산업, 문화, 역사, 인구구조에 적합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역수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매우 지역특화적인 서비스라는 특성을 갖고 있음.

- 정부주도의 평생학습 지원제도 확충과 지자체의 참여로 평생학습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40% 내외에서 정체 중

❑이미 평생교육은 중앙정부-지자체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연계하는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지역차원에서는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적인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은 국가와 지자체(교육청 포함)의 책무로「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무로 추진되어 왔고 지자체수준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에 좌우되는 경향이 강함.

2

1. 필요성

❑지역 차원에서 평생학습 조례의 제정, 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평생학습관-읍면동평생학습센터로 이어지는 형식적 전달체계는 대부분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작동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상황

- 교육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도 226개 기초 지자체 중 177개로 78.3%로 국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기초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필요. 또한 지정 이후의 성과관리를 통한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학습 추진 모델 발굴도 필요

❑평생학습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시간과 원하는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지역맞춤형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

- 이를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접근성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참여율 제고가 필요한 시점

❑지자체의 지역평생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와 지역단위의 다양한 자원을 평생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도의 평생학습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필요

3

2. 현황과 문제

가. 성과

❑평생교육은 문화, 교양 수준으로 읍면동까지 전달 체계 구축 중

- 이는 평생교육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
- 자치단체장이 평생교육의 중요성 인식
- 지방 조례의 제정 등 법적 체계 구축도 한몫

❑평생교육과 학습은 국가의 책무, 지역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확산

- 교육부, 국평원, 광역시도 및 진흥원, 기초지자체 및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대학평생교육원 등으로 확산
- 여기에는 지방 공무원의 역할, 평생교육사의 배치도 중요한 역할

4

《 평생교육법상 추진체계 》

	추진기구	수립계획	지원·집행기관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 교육부장관)	5개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 지자체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의장 : 시·도지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기초 지자체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의장 : 기초지자체장)	자체 평생교육계획 (근거 : 조례)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0).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안).

❑중앙-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도 구축
- 이는 평생교육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
- 자치단체장이 평생교육의 중요성 인식
- 지방 조례의 제정 등 법적 체계 구축도 한몫

5

나. 법·제도적 인프라

-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은 개인 선택의 문제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도 이를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사무로 규정
- 이에 따라 중앙단위와 지역단위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담기구 및 협의기구, 전달체계도 강제적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규정
- 국가와 개인, 중앙(교육부)과 지역(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포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역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모호하고 지역주도의 책무성 확보도 미흡

6

다. 지역차원의 평생교육 추진 역량

❑(예산)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을 추진할 예산 확보 미흡

- 대부분 광역 자치단체가 평생교육예산은 전체 예산의 일부에 불과

❑(전달체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촘촘한 지역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추진체계 및 역량 미비

❑(의사결정)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교육부장관 수립)에 따른 지역차원의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 평생교육 협의기구인 시·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을 지자체에 일임할 뿐 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는 사후관리체계는 전무

7

다. 지역차원의 평생교육 추진 역량

❑(전문인력) 지자체 평생교육전담기관의 전문인력으로서 평생교육사의 소극적 배치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 부족

❑(자원활용)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학습자원을 연계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의와 네트워크 부족

-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평생교육기관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학습자원화하기 위한 허브로서의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8

3. 구축 방안

가. 법적 인프라

❑ 평생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

- 법 제5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임무의 조문이 낮아짐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개정(평생교육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참여하여야 하는 의무로 변경..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정책 및 지원을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

❑ 지역주도 평생학습체계 구축은 지자체의 선택이 아닌 책무로 규정

- 각종 평생교육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항에 국가(교육부장관)외에 지자체 추가 : 평생교육법령 개정
- 지자체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현재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평생교육법」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을 개정하여 반드시 하도록 하여 지역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동을 촉진하도록 함.
- (예)「평생교육법」 제1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지원하여야 한다.

❑ 지자체가 전체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평생교육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강제할 수는 없음)

-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

9

나. 지역차원의 평생교육 추진 역량

❑ 종합행정접근

- 지역주도의 평생학습은 지역의 주체인 주민에 대해 환경, 복지, 여성, 건설 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지자체의 역량과 역할 강화가 필수적
- 교육행정 중심의 교육부-시도교육청과의 협업을 강화하되 주민자치와 지역주도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전달체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에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기능 추가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같이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법적 설치 근거 마련
-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 강화 : 지역단위 평생교육사업 및 정책 개발,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지원(연수, 복수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법 제21조 제3항 3호의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역할이 아니라 시·도진흥원의 역할로 조정

(예)「평생교육법」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실시하여야 한다.

10

나. 지역차원의 평생교육 추진 역량

❑ 성과관리

- 교육부가 시·도평생교육협의회(「평생교육법」 제12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체계 마련
-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평생교육법」 제14조)의 운영에 대해 평가하도록 시도지사의 책무를 신설
- 평생학습도시 성과평가체계 개편 : 지정 및 재지정 평가시 지역주도성, 지역 특성 맞춤에 초점
- 지역단위 평생학습체계 운영 실태 평가 : 시도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지자체 평가와 연계

❑ 전문인력

- 법 제26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배치해야 하는 평생교육사를 평생교육기관의 직원수가 아닌 지자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개정. 읍면동 단위까지 최소 1인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배치기준 강화. 법 제29조~제38조의 평생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기관을 확대하여 지역단위 평생교육기관의 전문 역량 강화

❑ 자원활용

- 현재 중앙정부 중심의 대학 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LiFE)를 지역 중심의 주민 친화형으로 개편 필요. 대학과 지자체 및 산업체가 연계한 사업운영 모델로 개편 등

11

4. 과제

❑ 메가트렌드

- 인구감소
- 학교교육의 축소 : 평생교육 확대의 논리
- 시민주도성

❑ 특성화

- 글로벌 학습도시화 추구 + 민주시민교육
- 중앙정부 사업 연계(행안부, 고용부)
- 평생학습과 지역의 연계
- 지역 차원의 평생학습은 동(마을)단위 평생학습으로 실현
- 지역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평생교육

❑ 과제도출 방법

-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발굴하고 전문가가 도와주는

12

5. 맺음말

- ❑ 시도진흥원, 학습도시협의회부터 평생교육사 직원 더 충원하고, 자체적으로 앞선 도시가 뒤따라오는 도시를 함께 데리고 가면서 평생교육사 일자리도 늘리고 평생교육사가 지역내 산업, 경제, 일자리, 여가, 문화, 관광 등을 학습을 통해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
- ❑ 주민들이 피부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교육부도 국평원도 아님.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들께서 학습도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셔서 평생교육사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내 인적, 물적자원을 학습과 연계하여야 할 때
- ❑ 지역에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협력하는 평생교육이 지역단위에서 활성화되어야

13

코로나19 함께 하는「무형식 평생학습」

□ **코로나19, 4차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발달로 전생에 걸친 평생학습 중요성 대두**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로 다가온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를 일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이러한 충격으로 평생학습 생태계도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집합 또는 대면 사업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고 비대면 온라인 학습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온라인 학습이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생학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학습생태계 필요**
- 아날로그 평생학습에서 → 디지털 평생학습
- 대면 중심 평생학습에서 → 비대면 평생학습(온라인 평생학습)
- (시민) 찾아오는 <다중 평생학습> → <개인 평생학습>

○ **기관 중심 평생학습에서 비대면 중심의 <개인 평생학습> 필요성 대두**

○ **100년 생애주기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생학습 개발 필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 **코로나19 함께 하는**(With-Corona) **평생학습**

지난해 광명 평생학습원에 정식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280개(약7,080명)이며 이 중의 동아리실을 매주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동아리는 151개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21개 동아리만 신청했습니다(1년새 약 20% 감소). 코로나로 인해 평생학습동아리 활동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아리는 활동 중단 또는 소멸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기관(평생학습원) 중심의 평생학습에서 탈피해 시민 혼자 스스로 배우고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시민들을 모으는 평생학습이 아닌 각자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원에서, 커피숍에서 편한 시간 또는 원하는 시간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4차산업 시대에서 앞으로 기관(평생학습원)의 기능과 역할이라 판단됩니다.

기관(평생학습원) 중심의 평생학습 강좌, 특강, 각종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대부분 40대~70대(여성)의 참여도는 매우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남성과 청년(19~34세) 평생학습 참여도는 매우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기관(평생학습원) 중심 형식의 틀에 매인 평생학습에서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무형식 평생학습(**Informal Lifelong learning**)**>을 지원하고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최근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국민에게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해야 한다' 라는 내용은 지금의 코로나 시대적 상황을 잘 고려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가칭)'이라 정하고 매년 만 50세 되는 시민에게 생애 한번 50만원씩 지급하는게 어떤지에 대한 시민 토론회(1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온국민평생학습장학금, 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이든 어떠한 형태든지 전 국민에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공정한 전국민 평생학습 참여, 개인 성장, 자기변화, 긍정적인 사회 기여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코로나19 시대 (지역)평생학습**

- 지역 오프라인 평생학습에서 온라인 평생학습으로 대전환기 맞음
- SNS 등 온라인 평생학습에 취약한 동아리 소멸

○ **무형식의 평생학습(Informal Lifelong Learning)**

- 아날로그 평생학습에서 디지털 평생학습 사회로
- 집단 평생학습에서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 **사회거리두기 평생학습(Social Bubble Learning)**

- 온라인 평생학습 강화 필요(예 :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편중된 문화예술 지역 학습 → 세계시민 글로벌 평생학습사회로
  예) 다른 나라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 치료, 완치 과정을 보며 배우는 교훈

□ **코로나19 함께 하는 광명평생학습은,**

광명은 2020년 지역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미래의 자기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마을자치리더 양성과정인 <2020 광명자치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자치분권학과, 마을공동체학과, 사회적경제학과, 도시재생학과, 기후에너지학과** 5개학과 학생 122명을 모집해 상·하반기 2학기로 나눠 1년 동안 과정을 운영해 작년 말 93명이 수료 졸업했습니다. 2021년에는 **반려동물학과**를 신설해 총 120명을 모집해 3월부터 운영합니다.

광명자치대학은 그동안의 주입식, 전달식, 수동적 교육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참여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함께 토론 공유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 광명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 지구촌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된 세계시민으로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 **소외받지 않고 차별없는 장애인평생학습**

지난 21동안 대한민국 평생학습은 비장애인 위주로 평생학습 활동을 하면서 비장인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장애인 평생학습을 추진해야 합니다.

평생학습에서 소외 받고 차별받는 이가 없도록 평생학습인(人)으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광명에만 장애인 1만 2,517명(총 29만8,599명 중 4.2%), 경기도에만 55만 9,878명, 전국에는 261만 8,918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의료기술 발달과 사고 등으로 후천적 장애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매년 19% 이상)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광명시는 지난해 4월 20일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발표하고 장애인 평생학습에 큰 관심과 배려 해 달라고 전국 지자체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편하면 모든 국민도 편합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든 국민도 행복합니다.

□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고민**

코로나19로 평생학습의 새로운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세계 선진국들의 코로나 방역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고 배운 게 많습니다. 이제는 지역 평생학습에서 글로벌 평생학습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평생학습의 지붕이 되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평생학습 이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중앙-지방정부의 소통하고 협력하는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정부-지방정부와 평생학습 협력**
- 중앙정부는 견고한 지붕, 지방정부는 따스한 이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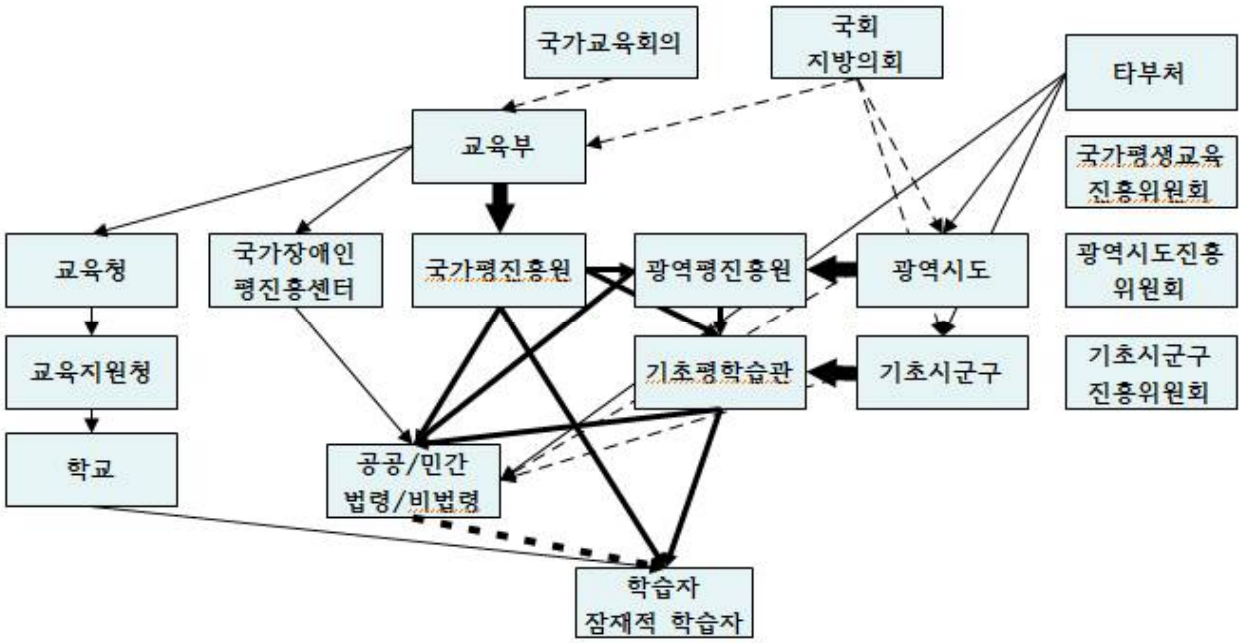
※ **2021 광명시 평생학습 역점업무**(붙임 참조)
○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가칭) 지급**(온라인 평생학습장학금)
- 현재 4개 지자체(광명, 화성, 영등포구, 논산) 추진 준비 중
- (사례) 싱가폴 'Skill Future Movement'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생애 한번 500달러씩 지급)

○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확대** : 소외 없고 차별 없는 장애인 평생학습

○ **광명자치대학 확대 운영** : 5개 학과→6개 학과 확대(반려동물학과)

현영섭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지역주도의 평생학습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



[그림 1] 평생교육추진체계

1. 개선의 원리

□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 40% → 60-70%

□ 평생교육의 중앙정부 역할 강화

: 교육부, 국회, 국가교육회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 시도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독립성

□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

: 제3섹터로서 시민공동체, 마을, 아파트단지, 동네

□ 다양성 중심의 평생학습

: 소외계층, 다양한 교육 내용(문화·예술, 직업, 시민 등)

□ 다중공간 평생학습

: 온/오프라인, 지식형성의 다중source

□ 전문성 중심의 평생교육

: 전문기관과 전문인력, 위원회 및 협의회의 기능 강화

2. 고민과 개선

1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장관의 평생교육정책 총괄기능 강화 필요**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 + 타부처 연계

타부처, 다양한 교육내용의 포괄적 체계(시설 인정, 프로그램 지원 등 개방성)

학습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학교 평생교육 강화(하지만 학교에는 그만)

2 **국가교육회의의 위상**

: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족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관계 설정(독립적·협력적 관계 구축)

국회 및 의회의 참여 확대

: 법령 제정과 예산 확보의 대상일 뿐임. 이에 참여 확대 및 평생교육정책 정치학 필요

국평원 수준의 다양한 전문기관 확대

3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강화**

: 지역 평진원/학습관의 독립성 강화(인사권, 사업계획 및 운영권 등), 교육청의 역할 찾기, 지자체의 평생교육지원 의무화(지역평생교육의 공공성), 평생교육시설 개설 및 관리감독권 위임, 광역간 및 기초간 평생교육협의체 운영

4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협의회** : 실질적 권한 부여 및 운영

5 **전문성 기반 평생교육체계 운영**

: 평생교육사 배치 기관의 전문성 인정, 평생교육담당자의 역량 강화, 평생교육시설 배치 기준 강화,

6 **다중공간 학습체계 구축**

: 온라인 학습기능 강화 지원 체계
(대학 자원, 공공 자원의 민간 시설 및 학습자 사용 확대)

7 **비법령 시설의 법령 평생교육시설 지위 부여**

: 평생교육사 채용 등 조건 충족하도록 지원, 전문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 제고

: 학습자 동기부여 강화 - 평생학습력 강화 정책

8 **다양성 제고의 평생학습**

: 소외계층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 조성
(소외계층 대상 시설 지원 강화, 소외계층 지원센터 구축)

9 **주민공동체사회의 평생학습 추진**

: 주민, 주민단체, 학습모임 등의 추진체계 주체로서 참여 확대, 주민주도 평생학습체제로 전환, 학교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지역공동체 회복, 주체는 주민공동체)

- 추진 체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20세기의 체계에 빠져 있다는 반성이 선행되어야 함. 주민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비전과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이후 추진 체계의 보완이 실행되어야 함.

종합 토론 ②

최하영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종합 토론 ③

조이현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회장)

「지역주도의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방안」

○ 우리 충남 지역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후학 양성은 물론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발전 및 우리 충남진흥원의 평생교육사업 자문과 심의를 해주시는 김현수 교수님의 주제발표를 매우 공감하면서 감명 깊게 들었음

○ 교수님께서는 「지역주도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구축방안에 대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인 면과 지역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셨음

○ 다만, 구축방안 -「지역차원 평생교육 추진역량의 성과관리 방안」 중에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와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교육부와 시도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자율성을 침해하고 반발이 예상됨으로 지역 평생교육 업무를 정부지원 시책사업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그 외 김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므로 평생교육사이면서 지역 현장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맡고 있는 원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소회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음

○ 인공지능(AI)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생 120시대의 인간장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국민 대부분은 평생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인식할 만큼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김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직까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응 전략이 소극적이고 미흡함

○ 지식강국과 국민행복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물질적 사회인프라 구축도 필요하지만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국민들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풍요가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지식강국과 국민행복국가 건설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획기적이고 담대한 정책변화와 함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매우 고무적인 현상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시고 마련해 주신 강득구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시고, 직접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으시다는 점임

○ 두 번째로는 이러한 역사적인 대전환의 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기반 강화를 위한 법령 등 제도정비와 전달체계 구축, 인력 및 재정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우리「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실무협의회 TF추진단에서 논의하여 요약 정리한 ①지역 평생교육전달체계의 현안문제 및 개선방안 ②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평생교육 추진 ③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및 역할 강화에 대한 세부 개선 방안을 붙임자료로 추가 제시함

지역주도의 평생학습체계 구축 방안 토론

1. 네트워크와 지역자원의 활용

ㅇ 지자체의 평생교육은 지자체나 지자체 소속기관이 직접하는 평생교육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음

ㅇ 지자체가 직접 기획하고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확산시키는 데는 예산과 인력, 그리고 내용 전문성에서의 한계가 있음.

ㅇ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적은 투입비용으로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그 대표적인 방법이 물적, 인적기반을 갖추고 교육서비스를 하는 지역의 교육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ㅇ 특히, 학령인구감소로 인해 물적·인적 자원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진 지역내 대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지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과 시설을 갖춘 대학을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하는 교육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들에게 위탁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교육과 학습을 구분하여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음

2. 인적자원의 전문성 제고

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자체의 평생교육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광역 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평생교육담당자 연수를 1년에 4회 내외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성 제고 및 상호교류협력을 하기에는 부족함

ㅇ 지자체 평생교육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와 광역지자체 평생교육진흥원이 보다 집중적인 교육훈련과 교류를 통한 상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여야 함

3. 교육컨텐츠의 제공

- ㅇ 예산과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교육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노력하여야 함
- ㅇ 예를 들면, K-MOOC에 상당한 예산를 투입하여 질 높은 원격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지역 시민들의 활용도가 낮아 보임
- ㅇ 국가가 전문성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개발, 보급하는데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를 통해 시민들이 K-MOOC, 늘배움 등에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ㅇ 지자체 시민들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자체와 더불어 찾아내야 함. 예를 들면, 지역내 대학과 함께 K-MOOC를 활용하여 블렌디드러닝, 거꾸로 학습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ㅇ 더불어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경로로 제공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프로그램제공 허브의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언론진흥재단과 협력하여 미디어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자체를 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붙임1] 2021 광명시 평생학습 주요 사업

<광명시 평생학습원>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가칭) 지급

헌법(제31조)과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지급내용 :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을 2차 토론회 후 결정

- 대　　상 : 1안) 30세, 2안) 50세, 3안) 25세 이상 시민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등

○ 사 업 비 : 매년 최소 27억 ~ 50억

○ 사업내용 : 평생학습 장학금에 관한 공론화(2차~3차 토론회)를 거쳐 대상 및 지급방법 결정 후 조례제정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지급

□ 그간의 추진사항

○ 2020. 2. ~ 10. :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지원 공식 검토

○ 2020. 11. 13. :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지원 토론회(1차) 개최

○ 2021. 1. 15. : 평생학습장학금 관련 실무자 회의(시장실)

□ 향후 추진계획

○ 2021. 2. :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지원 토론회(2차) 개최

○ 2021. 3. ~ 9.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 2021. 9. :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

○ 2021. 10.~ 12. : 2022년 본예산 편성 및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준비 (지역화폐 사용처 범위 설계 등)

□ 기대효과

○ 토론회를 통한 다수 시민의 의견 수렴으로'평생학습 장학금'인식 전환

○ 헌법에 명시된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제2의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 마련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유형별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계 마련 ○ 평생학습을 통한 장애인의 역량강화로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28,380천원(도비 : 5,100천원, 시비 : 223,280천원)

○ 사업내용

가. 장애인 평생학습 마을 조성

· 목　　적 :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포용적 평생학습도시 조성

· 기　　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6,380천원(시비)

· 세부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15명) 운영(4회)
- 장애인 평생학습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3회)

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 목　　적 :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및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

· 대　　상 : 장애인, 장애인가족, 장애인기관·단체, 광명시민 등

· 기　　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00,000천원(시비)

· 세부내용

- 직접사업 - 평생학습형 일자리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평생학습동아리 등
  (2020년 : 31개, 2021년 : 12개(예정)
- 보조금 지원사업 - 장애인단체·시설, 평생교육 유관기관, 광명시민 등
  (2020년 18개 기관, 2021년 16개 기관(예정)

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 목　　적 :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한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 참여기관 : 관내 비영리기관·단체**(4개 기관(예정)**

· 기　　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7,000천원(도비 : 5,100천원, 시비 : 11,900천원)

· 세부내용 :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등

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 목　　적 : 장애인 전동보장구 무료 급속충전기 설치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보장
· 기　　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5,000천원(시비)
· 세부내용
-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및 장소 제공(평생학습원 1층)
- 장애인 전동보장구 자가 수리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그동안 추진사항

○ 2020. 1. ~ 3. :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교부신청 및 공모 선정
○ 2020. 1. ~ 12. :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3회)
○ 2020. 2. 28.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선정
○ 2020. 4. 1. : 철망산 평생학습원 신축 이전(장애인평생학습실 2개실 마련)
○ 2020. 4. ~ 12. :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
○ 2020. 4. 17. :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0년「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공모선정
○ 2020. 4. 20. :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발표
○ 2020. 6. ~ 12.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운영
○ 2020. 9. ~ 12. : 성인문해교육(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사업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2021. 1. ~ 3. :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2021. 1. ~ 12. :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15명) 개최(연4회)
○ 2021. 1. ~ 12. : 국립특수교육원 업무협약에 따른 실무협의회 개최(연4회)
○ 2021. 1. ~ 12.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직접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업 개발 및 운영
○ 2021. 2.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구매 및 설치
○ 2021. 2. ~ 6.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모니터링 조사
○ 2021. 3. ~ 8. : 장애인 전동보장구 자가 수리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2021. 3. ~ 10. : 장애인 평생학습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
○ 2021. 3. ~ 11. :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

□ 기대 효과

○ 지역 내 장애인 평생학습 수요에 적극 대응으로 교육 참여 기회 증대
○ 장애유형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장애인의 역량강화 도모
○ 장애성인 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학습지원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우리는

평생학습 주체로서 행복한 일상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평생학습의 권리를 누리고,
배운 것을 나눈다.

우리는

누구든지 차별과 소외 없이 참여하고
학습이 자립과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이 되도록,
장애인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우리는

광명시민으로서 서로 배우고 도우며 살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는

지역 사회 안에서 인권과 평등,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도시로서,
광명시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언한다.

2020년 4월 20일

광명시장 **박 승 원**

「광명자치대학」 확대 운영

❖ 평생학습원 통합 총괄 운영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여 의제별 전문가로 양성
❖ 혁신의제 중심 운영학과 확대(5개→6개) 및 브랜드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1.
○ 사업내용 :
- 사업목표 : 이웃과 함께 협동하고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자치리더 양성
- 운영내용 : 시 발전을 위한 혁신 의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행정부서 간 칸막이를 파괴한 유기적인 협력과 의제별 통합적 자치 실천력을 가진 시민전문가 양성 및 조직화
- 운영학과(6개) : **자치분권학과, 마을공동체학과, 사회적경제학과, 도시재생학과, 기후에너지학과, 반려동물학과(2021 신설)**
- 모집인원 : 총 120명(6개 학과×20명)
- 운영방식 : 지역 혁신의제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문가강의, 토론, 실습, 사례학습 등
  、 입학식, 졸업식, 워크숍
  、 전공과정(학기제 / 1학기 10강+2학기 10강)
  、 동문회(1기 졸업생) 자치활동 지원 ※2020년 총 93명 졸업(5개 학과)

○ 사 업 비 : 118백만원
※ 2021년 사업비 : 입학식·졸업식·워크숍 16,000천원, 강사수당 65,680천원, 사업운영비 22,000천원, 자치회 지원 15,000천원

□ 그간의 추진사항

○ 2019. 9. 18. ~ 2020. 1. 15. : 유관부서(5개) TF회의(5회)
○ 2020. 1. 9. ~ 2. 11.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3회)
○ 2020. 2. 14. ~ 5. 19. :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숍(3회)
○ 2020. 5. 25. ~ 6. 12. : 5개 학과 학습자 모집(학과별 40명, 총 200명)
☞ 197명 서류접수(1차)
○ 2020. 6. 16. ~ 6. 19. : 대면면접(2차) 실시 및 합격자 발표 ☞ 122명 합격
○ 2020. 6. 22. : 학습비(50,000원) 납부 안내 ☞ 117명 접수

○ 2020. 6. 24. : 입학식 개최
○ 2020. 7. 1. ~ 9. 9. : 1학기 운영(9차시) ☞ 109명 수료
○ 2020. 9. 21. ~ 10. 5. : 2학기 학습비(50,000원) 납부 안내
☞ 1학기 수료자 109명 중 102명 접수
○ 2020. 9. 23. ~ 12. 2. : 2학기 운영(10차시) ☞ 93명 수료(졸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졸업식(12. 9.) 잠정 연기

□ 향후 추진계획

○ 2021. 2. : 2020 광명자치대학(1기) 졸업식 개최
○ 2021. 2. : 유관부서(6개) 실무진 TF 회의 → 학습과정 개발
○ 2021. 2. : 광명자치대학(2기) 운영계획 수립
○ 2021. 3. : 학습자 모집 및 선발(6개 학과×20명=120명)
○ 2021. 3. ~ 12. : 학과별 자치회 구성(5개, 1기 수료생 92명 대상) 및 활동 지원
○ 2021. 4. ~ 6. : 입학식 개최 및 1학기 운영
○ 2021. 7. ~ 8. : 워크숍 운영
○ 2021. 9. ~ 11. : 2학기 운영 및 졸업식 개최

□ 기대효과

○ 지역 혁신의제에 대하여 시민 중심의 학습과 토론을 통해 시민참여 실천 기반 마련
○ 행정부서간 칸막이를 파괴한 광명시 정책 융합 학습모델 확산
○ 시정을 보는 안목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자치역량 강화

[붙임2]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실무협의회 TF추진단 발굴 개선안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1 지역평생교육 전달 체계의 현안 문제 및 개선 방안

1. 읍면동 평생학습 센터 평생교육 기능 법제화

○ 2014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읍면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평생학습 전달체계가 정비

○ 현재 지자체별 1개의 평생학습관이 도시 전체의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대두 ‣ 지역 주민자체센터를 평생교육 권역별 거점 시설로 활용 필요(예 : 충남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을 추진(공주, 논산, 예산, 홍성, 당진))

○ 읍면동 평생학습 체계 구축의 필요성

- ‘도-시군구-읍면동-마을’의 층위별 평생교육 거점기관의 역할 및 센터로의 필수 기능(평생교육사 배치) 개선을 통한 근거리 생활권 평생교육 전달기능 강화 필요

※ 평생학습 체계 중 상대적으로 평생교육 기능이 약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 전담인력을 배치 및 보강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화 할 수 있음

- 마을 사업(마을교육공동체, 마을만들기, 행복교육지구 등)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자치-평생교육’ 간 연계의 확대와 이를 통한 개선사항의 보완 필요

2.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전달체계 현안 문제 및 개선 방안

○ 2016년 「평생교육법」개정 이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확대 근거 마련

○ 2019년 12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제시 (국립특수교육원에 국립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일반평생교육 업무 관련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장애인 평생교육관련 업무는 국립특수교육원으로 전달체계가 이원화 됨.
- 이원화된 전달체계로 업무 과중과 혼선 및 효율성이 떨어짐.

➪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달체계를 국평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3. 국가-시도평생교육지원 협력 체계의 일원화

○ ‘교육부-시도-시군구’ 간 평생교육지원의 협력체계 필요

(예 :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과 관련 하여 시도진흥원을 제외한 시군구 위주의 사업 편성 및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 시도진흥원 현황이 공유되지 않음)

○ ‘국가-시도’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교육부-국평원-시도평생교육진흥원’ 기관장 협의회 구축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
- ‘교육부-시도-시군구(평생학습도시)’ 실무자 협의회 구성을 통한 평생교육 현장 사항 반영 필요
- 국가 차원의 ‘국가-시도’ 간 협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필수 평생교육 예산 반영에 대한 협의 필요

(예 : 평생학습도시 및 재지정평가 시 국가지원금(현 지원예산)+시도지원금이 추가 지원(매칭)되어 ‘국가-시도’ 간 협력 사업으로의 기능성을 부여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확보·확대 될 수 있도록 개선

⇨ 시도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긴 쉽지 않으니 국가에서 매칭되는 사업의 성향으로 점차 변화되어 전략적·공격적 예산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부관계자-국평원-시도관계자-시도진흥원’간 정기 간담회 운영 필요 : 운영 및 전달체계의 이원화 개선 및 평생교육 정책의 지역별 현황 반영 필요
- 평생교육도시협의회 및 평생학습도시의 필수 항목에 시도진흥원과의 연계성 부분에 대한 항목개선 직접 언급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의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

2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평생교육 추진

○ 현재 국가의 지역 평생교육 정책 및 예산 방향은 지방정부의 책무에 치중

○ 지방정부 책무 강화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도시 등 생활 속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는 성과도 일부 있으나, 수도권 등의 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불평등 격차는 심화 추세

-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양질의 교육 혜택과 교육 기회가 낮음

○ 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정책적 관심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유인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 평가와 같은 채찍 이외 정부 지원의 당근이 함께 이뤄져야 함

○ 국가 균형발전에 의한 지역 평생교육 균형발전 추진 방안

- 전 국민의 보편적인 평생교육의 향유 권리를 위해 평생교육의 균형 발전적 정책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예산 지원

> * 예, 법 제34조제2항제1호 다목 또는 제34조제2항제6호 개정
> (전)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후) 지역의 평생교육·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3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전국17개 시도에서 설치 운영 되고 있음 - 현재 독립법인 6개, 융합법인 8개, 지정위탁 3개

※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21. 04월 중 재단법인으로 설립 예정

○ 현행 법령상 시도진흥원 역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시도진흥원의 역할은 한정적(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비슷함)
-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시도의 평생교육 컨트롤 타워 및 허브기능이 필요함

※ (예: 지역 내 평생교육 정책, 연구, 통계 및 프로그램 운영의 개발 및 지원,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법제화) 등 필요)

○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시도 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

- 현재 국평원은 약 180명 이상의 인력 구조에서 다양한 국가적 사업 수행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등 타 영역과 달리 오로지 시도의 예산으로만 운영 되고 있는 시도진흥원은 경기, 서울, 대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명도 안됨

○ 시도의 정책적 관심 촉구와 함께 문화예술분야처럼 국가 지원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로 지방문화재단 지원예산 편성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

> * 예, 국비지원금(2020년 충남기준)
> - 문화예술 국비지원금(2020년) 충남 5,400백만원
> - 평생교육 국비지원금(2020년) 충남 25백만원